

광주 건축물 층수제한 폐지... 스카이라인 살린다

시, 도시경관 개선방안 발표

“창의적이고 유연한 도시 디자인
즐길수 있는 지역명소 만들자”

광주시가 특색있는 경관조성을 위해 스카이라인을 개선하기로 했다. 획일적 제한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에 맞는 경관을 만들겠다는 취지지만, 역대 민선의 고도제한과 완화정책이 오히려 도시경관을 해쳤다는 비판에 따라 민선8기 고도제한 완화는 도심정비 철학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광주시는 민선8기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건축물 층수 제한 폐지 △주거건설 사업 통합심의 활성화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차등 적용 등이다.

그동안 광주시의 고도제한 정책은 개발과 자연경관 침해 등 가치에 따라 규제와 완화를 반복해왔다. 1995년 민선1기에 무등산 경관을 보호하고 고층 건물이 도시경관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도제한이 도입됐다. 민선2기에는 고도



강기정 광주시장이 21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창의적 도시경관 건축물 디자인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제한 정책을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고도제한이 완화된 것은 민선3기인 2000년대 초반이다. 당시 광주시는 개발과 경제성장 촉진 차원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높이제한을 완화했다. 이후 민선 4기에는 고도제한이 재도입됐고, 5기엔 완화, 6기 고도제한 재개정을 반복해왔다. 이미 몇차례 규제완화로 인해 광주 도심에 초고층 아파트들이 건설됐고 광주

의 상징인 무등산 조망을 해쳤다는 비판이 쇄도하자 2021년 7월 민선7기는 단기 처방으로 ‘상업지역 40층, 주거지역 30층 이하’의 건축물 고도제한을 시행했다.

하지만 기존의 고도제한 정책이 획일적 층수제한과 수익성 위주의 개발계획에 머물러 오히려 광주가 병풍형 아파트 천국의 답답한 회색도시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선8기가 내놓은 ‘도시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개선 방안’은 이러한 지적과 비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역별 여건에 맞는 차등 규제를 통해 창의적 건축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지난 2021년 7월 고시한 획일적인 ‘건축물 높이 관리원칙’을 해제하고 올 상반기에 ‘층수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도시경관계획 개선안을 마련,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후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할 계획이다.

무등산 녹지·국립아시아문화전당·송정역세권·영산강 및 광주천 등 경관관리가 중요한 전략지역은 지역특성에 따라 차등 관리하며, 광천사거리·백운광장·원도심·광주역 일원 등 상업지역이나 주요관문은 창의적 건축물로 도심의 활력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또 ‘주거건설사업 통합심의 제도’ 도입으로 건축물 승인이나 심의기간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통상 9~10개월 소요되는 심의기간이 약 6개월로 단축된다. 사업자가 건축물

심의에 들이는 정성과 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자발적으로 건축물 디자인 향상에 노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겠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광주시는 2024년 7월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용적률 개선’을 검토해 우수 디자인 건축물 조성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세계 주요 도시들은 창의적이고 유연한 도시 디자인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특색 있는 건축물을 랜드마크화해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지역 명소를 만들고 있다”며 “광주시는 시민 누구나, 어느 곳에 살든지 조망권이 열리고 바람길은 커지고 공원이 함께할 수 있도록 창의적 도시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도시계획전문가는 “자치단체장의 도심정비 철학이 어떤 방향인가가 중요하다”면서 “역대 민선의 고도제한 완화가 결국에는 도심경관을 저해한 결과를 낳듯 이번 민선8기의 고도제한 폐지로 더 이상 무등산 조망을 망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상지 기자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1일 전남도 관계자와 함께 과학기술정책보통신부 서울 사무소를 방문해 이종호 장관과 면담을 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 제공**

김화진 위원장, 과기부장관에 전남 현안사업 지원 요청

우주발사체 조립공장 유치 요구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이 21일 전남도 관계자와 함께 과학기술정책보통신부 서울 사무소를 방문해 이종호 장관과 면담을 하고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 대형 연구시설의 특정 지역 편중과 전남에 연구개발(R&D) 예산이 전국 최하위로 배정된 점을 설명했다. 이어 지역 불균형 개선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남이 추진 중인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과 우주발사체 조립공장 유치가 조기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나주혁신도시는 한국에너지공대와 광주과학기술원 등 연구·인력 양성 기반이

구축돼 있어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부지에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우주발사체 조립공장 유치를 건의한 고흥군은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해 있는 등 발사체산업 핵심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김 위원장은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과 우주발사체 조립공장 유치는 전남의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초강력레이저 분야와 우주산업은 국가 위상과 미래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국가 균형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라도 전남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항지 기자

전남도, 올 농어촌 1371동 주택 개량... 전국 최대

전남도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 촉진을 위해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전국 최대 규모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사업 규모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배정한 전국 6715동 중 1371동으로 전체 사업량의 21%를 차지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 심사를 거쳐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개축과 재축을 포함한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원을 연 2% 낮은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또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최대 280만원의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사업 대상은 연면적 150㎡ 이내 농어촌 주택이다. 사업 참여를 바라는 도민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주택·건축업무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최항지 기자**

전남도, 아열대 과수 고소득 전략작목 집중 육성

지원 확대... 사업비 706억 투입 시설 현대화·스마트팜 보급 등도

전남도가 아열대 과수를 고소득 전략작목으로 집중 육성하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과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후시설 현대화·스마트팜 보급 확산, 시설원에 단지화·집단지화 지원에 706억원을 투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89억원 증가한 금액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망고, 바나나 등 아열대 과수를 고소득 전략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급등한 난방비와 전기요금에 대응해 생

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분야별론 시설원에 생산비 절감을 위해 다중보온커튼 등을 지원하는 에너지 절감 시설 105ha·90억원,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1.1ha·16억원, 기름 난방을 가격이 저렴한 전기온풍기 등으로 대체하는 생산비 절감 사업 33ha·16억원 등이다.

노후 시설하우스 현대화와 스마트팜 보급 확산을 위해 시설원에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100ha에 42억원을 투입한다.

또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200억원,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53ha·23억원 등 시설원에 분야 10개 사업

에 총 432억원을 지원한다.

망고 등 아열대 과수와 기능성 채소 등 경쟁력 있는 고소득 시설원에 품목의 단지화·집단지화를 통한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은 16ha에 163억원을 투입한다.

과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분야는 생산시설 현대화 36억원,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과수 생산 기반 구축 30억원,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10ha·25억원이다.

매년 발생하는 서리·냉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해 예방시설 지원 200ha·20억원 등 과수분야 4개 사업 지원 예산도 총 111억원을 확보했다. **최항지 기자**

전남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추가모집

다양성 확보로 기부 활성화 기대

전남도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다양성 확보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급업체 추가 모집에 나섰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118개 답례품목 중 112개 품목을 공급할 업체를 모집한 결과 71개 품목만 공급업체가 결정됐다.

이에 도는 최근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하고 41개 품목을 추가 모집키로 했다. 이후 관광·서비스 분야 3개 품

목을 답례 품목으로 추가 선정해 총 121개 품목이 됐다. 추가 선정된 관광·서비스 3개 품목은 올해 전남도가 개최하는 국제행사인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국제농업박람회 입장권, 주택 화재 안전 꾸러미 설치 서비스다.

주택 화재 안전 꾸러미 설치 서비스는 전남소방본부와 협업을 통해 소화기 등 주택용 화재 예방 시설물을 고향에 계신 부모님 댁에 설치하고 소방점검 등을 해주는 서비스다.

공급업체 추가 모집에 나선 항목은 농

수축산물과 가공식품 41개 품목으로 시·군에 생산 기반을 둔 특산물 등이다.

추가 공급업체는 기업 역량, 지역 연계성, 사업 계획 등 5개 분야, 10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추가 모집 관련 제안서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3월3일까지 전남도 고향사랑과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3월까지 공급업체 선정을 마무리짓고 4월부터 고향사랑e음(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답례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항지 기자**

광주전남연구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협력

광주전남연구원(광전연)이 국내 시·도 연구원 2곳, 한국지역개발학회와 함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광전연은 서울연구원·부산연구원·한국지역개발학회와 오는 24일 오후 1시 서울

연구원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4개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엑스포전국적 열기 확산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 구축, 도시환경 개선 공동 연구 등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상호협력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이날 지방시대 공동 대응에도 협력키로 하고 지방시대 공동 전략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지방분권, 지방재정 강화, 균형발전 등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전략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박상지 기자**